

## 개인별 신분등록제에 관한 연구

정 현 수\*

---

### 초 록

---

현재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통가족의 변화로 인하여 신분등록부로서의 호적은 이미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호적의 편제원리는 가제도의 잔재를 불식하는 방향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개인 각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로 개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헌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기본이념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호적의 새로운 편제방법으로서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고찰하였다.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그 동안의 전통적인 집단주의 사고방식을 불식시키고 개인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신분등록방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호적의 새로운 편제기준을 가를 극복하고 현재의 가족관계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에 둔다면,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립적인 형태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부부와 친자라고 하는 특정한 가족상을 기준으로 법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개인의 자율성을 고양할 수 있는 가족법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 내에서의 모든 선택은 각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주체적인 생활방식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가장 순수한 선택일 것이다.

---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 I. 서 론

1958년 민법제정 당시부터 가족법 분야에서의 호주제도의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2001년 3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은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에 대하여 각각 위헌제청을 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계류중이다.<sup>1)</sup> 또한 현재는 이미경의원의 대표발의로 호주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법중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2003. 5. 27)된 상태이며, 법무부에서도 “호주 및 가족의 범위를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2003. 9. 4)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호주제도의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호적제도의 개편으로까지 확대되어 그 대안문제가 논의의 핵심이 되어 왔었는데, 최근 법무부에서는 그 대안으로서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호주제도 자체의 존폐논쟁에 관하여는 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호주제도에 관한 존폐논의 및 그 폐지의 당위성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호적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호주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미리 한 가지 언급하여 두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호적제도 자체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족이 붕괴되는 것으로까지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호주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가’사상 즉,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봉건적인 가부장제 ‘가제도’(또는 현실과 유리되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호주와 가족으로 이루어진 관념적인 법률상의 단체인 ‘가’)를 폐지한다는 것으로서 부부와 자녀중심의 현실의 생활공동체 그 자체를 법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sup>2)</sup> 그러므로 호주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현실의 생활

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호주변경신고에 대한 불수리처분사건(2000호파1887사건)에서 민법 제778조(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에 관하여, 그리고 서부지원(2000호파1095사건)은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에 대하여 각각 위헌제청을 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계류중에 있다.

2) 현행 민법상의 가족은 함께 사는 친족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관념적인 ‘가’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가족과 현실생활

공동체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의 새로운 편제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 편제방법으로는 먼저 호적이 갖는 신분등록제도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면서, 또한 호주제도와 관련된 호적제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호주제도의 폐지에 따른 호적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현행 호적제도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한 후, 그동안 호주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그 대안의 하나로서 논의되어 왔던 새로운 신분등록방식인 개인별 신분등록제에 관하여 간략히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 II.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제도 개선의 필요성

### 1. 호주제도와 호적제도의 관련성

우리 민법은 관념적 가족단체인 가(家)를 상정하여 두고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하여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있다. 따라서 민법에 부종성(附從性)을 갖는 호적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민법 제 778조, 제 779조) 국민 개개인이 소속될 가가 결정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한 하나의 호적을 편제한다(호적법 제 8조). 이와 같이 가제도는 호적제도와 결합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보장받고 현실적으로 각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가제도상에서 호적은 필요조건인 것이다.

더욱이 우리 가족법은 고대 중국의 종법제(宗法制)의 영향으로 남계중심의 가부장제 가족제도원리를 근간으로 한 ‘가제도’로 인하여 혼인관계, 친자관계 등 가족법 전반에 걸쳐서 가의 통제를 받고, 가의 존속이라는 가치에 종속되고 있다.<sup>3)</sup> 따라서 이러한 ‘가’를 계속 유지하는 자로서 호주를 필요로

속의 가족은 관련이 없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 친족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주와 가족’ 부분이 삭제되더라도 현실의 생활공동체인 가족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3) 처가입적혼인 입부혼(入夫婚)도 역시 법률상의 외손봉사(外孫奉仕)를 통한 가계계승의식의 표현이며 근본적으로는 변형된 종법사상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박병호, “호주제의 변혁과 제문제”, 민사법학의 제문제(소봉 김용한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하고, 호적은 가를 실체화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의 호적제도는 호주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호주제도는 호적제도에 의해 그 실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이와 같은 가제도는 가족생활에서 헌법상의 개인의 존엄·양성평등이념(헌법 제36조 제1항)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사상의 구체적 실천기구라고 할 수 있는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호적제도도 그에 맞게 변경된 모습으로 즉, 그동안 호적편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관념상의 ‘가’와 ‘호주’가 없어지기 때문에 호적제도 고유의 목적과 이념에 따라 새로운 호적편제의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호적의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현행의 호적제도는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국적이나 행위능력의 유무, 친족관계 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세적으로 공시·공증한다는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신분등록제도이므로 호주제도의 폐지와는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외에도 현행의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해 또한 적지 않다. 더욱이 호적의 편제원리는 민법상의 호주제도와 더불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이념에 반한다는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어, 신분등록부로서의 호적은 이미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 2. 호주제도의 폐지에 따른 호적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현행 호적제도의 문제점

### 1) 호주제도의 폐지에 따른 호적제도 개선의 필요성

그동안 계속해서 논의되어 온 봉건적 호주제도의 폐지는 ‘가’사상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sup>4)</sup> 그렇다면 민법상의 호주제도를 폐지할 경우 이러한 가사상을 근본적으로 청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는 생

1990, 177면).

4) 박동현, “호주제도론치론의 허구”, 가족법연구 창간호, 한국가족법학회, 1984, 26면.

각해볼 문제이다. 물론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이른바 우리나라의 봉건적 가족제도에서 우러나오는 비민주적 의식을 불식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당히 민주화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또한 법률상의 가족과 사실상의 가족의 괴리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sup>5)</sup> 그렇지만 현재 국민들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사상은 민법상의 호주(가)제도의 폐지만으로는 불식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사상은 민법상의 호주(가)제도와 이와 표리일체 관계에 있는 호주중심의 호적제도에 의하여 배태되어 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1990년의 민법개정을 통하여 호주제도가 거의 형해화되어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의식이 뿌리깊게 남아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가의식을 조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바로 아직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는 민법상의 호주제도와 호적법상의 호적일 것이다.

결국, 실제로 가중심의 국민의식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호주제도의 상징성보다는 오히려 ‘가’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호적제도상의 호적의식으로부터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즉, 가를 단위로 등록하는 호적제도의 특징상 실제로 국민의 의식 속에는 민법상의 호주의 권한보다는 동일호적 내에 있다는 의식과 그 대표자라는 관념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식은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sup>7)</sup>

또한 호주(가)제도는 제도로서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호주중심의 호적제도

5) 김주수, 친족·상속법(제5전정판), 법문사, 1998, 351면.

6) 즉, 출생하면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여성의 경우에는 혼인하면 夫의 호적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식 등 인생의 중요한 신분변동사항을 호적에 기재한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호적의식은 매우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정희, “호주제도를 폐지할 경우 호적제도의 정비방안”, 호주제도 정비를 위한 검토(한국가족법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2003. 6. 17), 한국가족법학회, 14면.

7) 일본의 경우 호적의 편제기준으로서 호적필두자를 결정하지만 부의 氏를 칭하는 혼인이 약 98%(1991년)로 대부분의 경우 夫가 호적필두자로 되고 있다고 한다. 그 때문에 가제도와 호주도 폐지되었지만, 호적을 가로 간주하고 입적·제적을 가에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으로 인식하며, 호적필두자를 ‘주인’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二宮周平, 人權と戸籍, 部落解放研究所, 1995, 8면).

가 사회생활과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sup>8)</sup> 전래의 가부장적 가관념(가의식)은 생명력을 지닌 채 그 존재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 전반 특히 가족사회에 뿌리깊이 잠재되어 있는 가부장적 가관념(가의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호주제도의 폐지와 함께 가의식의 온존장치인 호주중심의 현행 호적의 편제원리도 근본적으로 개혁·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2) 호주제도와 관련된 호적제도상의 문제점

### (1) 호적제도의 특징상에서의 문제점

현행의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민법 제779조), 이것은 호적 본래의 역할 및 기능의 발휘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적인 역사적 측면에 의한 등록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족단위의 등록에 의하여 호주와 그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각자의 신분행위를 일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호적은 개인의 일생동안의 신분관계의 변천을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친족관계를 무한히 검색할 수 있다. 결국 현행 호적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호주중심의 가족단위 등록방식은 우리 국민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관 또는 가의식의 배태·온존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호적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가 국민의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독점적으로 입수하여 국민을 관리할 위험성으로 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현재 호적업무를 전산화한 이상은 컴퓨터의 조작으로 등록된 정보를 개인별로 또는 가족단위로 결합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읍·면을 네트워크화하는 온라인 시스템 하에서는 전국민의 친족적 신분관계정보가 국가에 의하여 집중관리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점과 더불어 호적의 실질적인 공개원칙<sup>9)</sup>으로 인하여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

8)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목적과 제도가 완전히 변형되어 현행 호적제도의 골격이 만들어 진 것은 1909년의 民籍法과 民籍法執行心得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거의 한 세기에 이르고 있다.

이에 타인에 의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호적전산정보시스템에 있어서는 개인의 신분관계정보를 그 데이터 파일로 하여 업무처리를 행하게 되고, 그 취급되는 데이터는 비밀성, 프라이버시성이 극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와 엄격한 관리를 행하는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2) 호적제도의 양성평등이념 측면에서의 문제점

### ① 가제도상의 불평등

우리 민법은 “호주와 가족”을 상세히 규정하여(제778조~제796조) 호주승계제도로서 호주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호적법상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그 호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을 편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세한 호주승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호적법 제96조~제101조). 1990년의 민법개정시 호주제도는 강제적 신분상속으로서의 호주상속이 임의적 호주승계로 전환되었고(제980조 이하), 그 권리도 대폭 축소되어 현행의 호주제도는 사실상 명목적인 제도로 되었다. 결국 호주승계제도는 호적을 유지하여 가기 위한 존재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고, 호주는 호적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외에는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민법은 이러한 호주승계의 순위를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가족인 직계비속여자·처·가족인 직계존속여자·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으로 규정

9) 2000년 12월 29일의 호적법 개정(법률 제6308호)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적부의 열람 및 호적등·초본의 증명신청 또는 호적 기재사항 증명서의 교부청구시 신청인의 범위 및 청구사유의 기재에 의한 제한, 부당한 목적에 대한 교부청구의 제한(호적법 제12조 제2항, 호적법시행규칙 제21조) 등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호적법은 호적의 비공개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실무에 있어서의 업무상황을 보면 호적공개의 제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서 여전히 종래의 호적공개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호적관련사항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제한하여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를 간접적으로 보호하려는 개정법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정현수, “개정호적법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9권 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2. 12, 307~342면 참조.

하고(제984조)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가 유아이거나 어린 아동일 경우에도 제1순위의 호주승계인이 되어 가를 대표하게 된다. 이것은 대(代)를 이을 아들을 필요로 하는 남아선호사상과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는 합법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고, 양성평등이라는 가족정책이념에도 배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호주제도의 폐지와 함께 호주 중심의 호적제도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② 입적편제상의 불평등

민법은 자녀의 입적(제781조), 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제785조), 혼인한 여성의 입적(제826조 3항)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입적원칙으로서 자녀의 부가입적(父家入籍)과 혼인한 여성의 부가입적(夫家入籍)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규정에 따라 호적법도 혼인으로 신호적을 편제할 경우 부(夫)를 호주로 한 호적을 편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의 2). 이러한 호적상의 입적편제는 다음과 같은 여성차별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가. 부부가 이혼한 경우 모가 자의 친권자로서 실제로 자를 보호·교양하고 있더라도 모가의 호적으로 이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부가입적이 우선이므로 부가에 입적된 자를 모가의 호적에 편제할 수 없고, 부가입적에 맞추어 부가의 호적에 편제된 자를 민법 제785조의 입적신고에 의하여 모가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도 없다.<sup>10)</sup> 다만 모가 재혼하여 그 부(夫)가 그 자(子)를 입양할 경우에만 모는 자와 동적(同籍)할 수 있을 뿐이다.<sup>11)</sup> 반면에 모가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가입적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인지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부가에 입적되므로 자의 호적을 부가의 호적으로 옮겨야 한다. 따

10) 호적예규 제349호(1979. 4. 10)는 “부가에 입적되어 있는 자를 모가에 입적시킬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11) 이 경우의 양친(養親)과 친생친(親生親)은 공동친권자가 된다고 해석된다(김주수, 앞의 책, 311면).



라서 이러한 부가입적 우선의 원칙은 부계혈통만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양성평등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처가 부(夫)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 가에 입적시킬 수 있다(민법 제784조 1항). 그러나 반면에 부의 혼인외의 출생자 즉, 처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의 입적에 대해서는 처의 동의를 요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봉자(加捧子)의 입적에 대하여 夫의 동의를 얻게 한 것은 가부장제 가족제도적인 요청에서 나온 것으로서 부계혈족이 아닌 혈족의 입적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가족생활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상의 가족정책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 3) 문제점의 개선방향

#### (1) 민법상 호주제도의 삭제와 관련규정의 개정

호주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행 민법상의 제4편(친족) 제2장 호주와 가족(제778조~제796조) 및 제8장 호주승계(제980조~제995조) 부분이 민법전에서 삭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민법 중 친족상속편의 개정<sup>12)</sup> 및 기타 호주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개정(예컨대, 가사소송법 등에서의 호주·가족이라는 용어의 삭제 및 변경)하여야만 한다.<sup>13)</sup>

더욱이 민법 제778조~제796조에는 가의 변동 및 자의 성·본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는데, 호주제도의 폐지와 가장 관련이 깊고 민감한 문제가 자녀의 성과 본 문제일 것이다.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자동성(父子同姓)의 원칙과 성불변(姓不變)의 원칙은 호주제도의 기반이 되고 있는 부계혈통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sup>14)</sup> 그렇지만 자의 성·본에 관

12) 호주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제826조 제3항 및 제4항도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13) 2003년 5월 27일 이미경의원 대표발의의 민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9월 4일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민법중개정법률안 참조.

14) 대법원은 “관습법상 성은 부계혈통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 성질

한 규정은 호주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삭제되더라도 이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곳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sup>15)</sup> 즉, 자의 성과 본에 관한 규정의 성격을 명시하여 관련제도와 함께 규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성과 본 제도가 개인의 동일성을 표시해 주는 표지라면 부모와 자녀 관계를 규율하는 제4장 제1절(친생자)에, 그리고 부계혈연을 표시하는 표지라면 제1장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호주제도의 폐지와 함께 자의 성을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 보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다면, 자의 성·본 규정은 제4장의 친생자 부분에 신설(예컨대, 제865조의 2)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16)</sup>

## (2) 호적의 편제방식 및 편제원리의 개선

민법상의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앞에서 본바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하여 호주 중심의 호적제도는 “헌법상의 가족정책이념인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이념의 구현과 가의식의 불식”이라는 방향에서 그 편제방식 및 편제원리를 개선하여야 한다. 더욱이 이와 같은 새로운 편제원리에 입각하여 호적제도를 개편하는 경우에는 가부장적 가족의식으로부터 부부중심의 가족의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가부장적 가족관으로부터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고양할 수 있는 개인존중의 가족관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인격존중이념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는 편제원리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장래

의 것은 아니다”고 하고 있다(대판 1984. 9. 27, 84 스 1).

15) 우리 민법상의 성은 명과 함께 단순히 개인의 동일성을 표시해 주는 표지(標識)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혈족계통을 나타내는 표지이기도 하므로, 가(가적)의 명칭인 일본 구 민법에서의 씨(氏)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자의 성과 본에 관한 규정을 부자동적을 원칙으로 하는 호적편제원리와 함께 규정한 것은 입법자들이 성과 본에 관한 의미를 간과하고, 가의 구성원인 호주와 가족은 그 가의 씨를 칭하여야 한다는 일본 구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 호주 및 가족에 위치하고 있던 제746조를 본받은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신영호, “『호주와 가족』 규정의 정비에 관한 검토”, 호주제도 정비를 위한 검토(한국가족법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2003. 6. 17), 한국가족법학회, 9면).

16) 참고적으로 자의 성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전통적 관습 및 법감정, 자녀의 최선의 복리, 가족생활의 다양성 등과의 조화를 이루는 의미에서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현실적 방안의 하나로서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이승우,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의 관련법령의 정비방안 -민법을 중심으로-”, 여성정책포럼(2003, 가을호), 한국여성개발원, 33면; 법무부의 민법중개정법률안 참조).

에 있어서 호주제도의 폐지와 함께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첫째, 헌법상의 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둘째, 현재의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가장 적합하며 셋째, 그 동안의 전통적인 집단주의 사고방식을 불식시키고 개인의 책임의식과 자주독립심을 한층 더 고양시킬 수 있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것이어야만 할 것이다.

### III.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지향방향

#### 1. 헌법이념에 합치하는 편제원리의 지향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헌법이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혼인·가족제도도 이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우리의 가족제도가 전근대적인 봉건적 가부장제를 부정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근간으로 형성·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헌법 제36조 제1항은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과 제3자가 혼인과 가족의 사적인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적극적으로는 개인의 존엄과 가족 구성원의 평등에 바탕을 두고 성립되고 유지되는 혼인·가족제도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sup>17)</sup> 이는 의견과 사상의 다양성을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가족법도 현재까지의 부계혈통중심의 확대가족을 가족의 모델로 하기보다는 위와 같은 헌법상의 이념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가족이나 부부의 일체성보다 개인으로서

17) 현재 2002. 8. 29, 2001 헌바 82 참조.

의 생활방식을 존중하고, 또한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족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상과 같은 헌법의 기본이념은 호적제도의 개선으로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이념적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편제원리에서도 헌법상 혼인·가족제도에 부합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2. 현행 호적제도의 장점유지

헌법상의 가족정책이념인 개인의 존엄·양성평등이념에 맞추어 민법상의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호적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가부장적인 가관념(가의식)을 불식하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 현행 호적제도상의 장점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호적법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一人一籍의 호적을 만들고 그 사람에 관한 모든 신분사항을 집중시켜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분등록방식을 인적편제방식(人的編製方式)이라고 한다.<sup>18)</sup> 인적편제방식은 특정인에 대하여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의 모든 신분사항을 신분변동이 있을 때마다 하나의 장부에 집중시켜 수록함으로써 특정인의 신분변동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동태적으로 공시한다. 따라서 신분등록부의 편제방식으로는 부부·부모·친자 등 가족의 신분관계를 일람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편제방식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 3. 정보사회의 전제조건에 합치하는 편제방식의 채택

우리나라 호적은 친족단위로 기록하기 때문에 호적에는 그 가의 소재지인 본적을 비롯하여 호주와 그 가족원의 성명, 출생지,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18) 그리고 인적 편제방식은 하나의 장부에 가족을 한 단체로서 기재하는 ‘가족별 등록방식’과 각 개인마다 하나의 장부를 두는 ‘개인별 등록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의 호적에서는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인적 편제방식과 대비되는 편제방식을 “사건별 편제방식”이라고 하는데, 사건별 편제방식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입양 등 각 신분사항별로 개인의 장부에 따로따로 등록시키는 방식이다.

호, 사망일시·장소, 신분행위(혼인, 이혼·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인척관계의 종료, 양자입양·과양, 혼인·이혼 등의 취소와 무효, 인지) 외에도 무능력자의 친권자·후견인, 추정상속인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생활·가정·신분관계정보<sup>19)</sup>를 기록하고 있다. 즉, 호적은 개인의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이나 가족관계사항을 상세하게 계보적으로 기록하는 인적편제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친족에 대한 정보를 일람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각 개인의 신분사항을 일람할 수 있다는 것은 호적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알 수 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본인 및 가족의 사생활보호와도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결국 이와 같은 점은 현재 전산화된 호적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통합처리보다는 분산처리(예컨대, 필요사항만의 열람 등)가 더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사회의 전제조건에 합치하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추진하여온 호적전산화도 정보사회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이용은 전제조건이지만, 여기에서 예외영역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호적정보이다. 왜냐하면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즉, 개인의 출생·혼인·이혼 등의 인격적 가치를 갖는 신분관계정보가 유출되어 오·남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를 갖는 개인정보보다 회복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호적정보는 개인정보의 분류에 있어서도 그 공개를 절대적으로 제한하여 가장 강력한 보호가 요청되는 내면의 개인정보인 절대적 개인정보이고, 당사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보인 직접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sup>20)</sup>

결국, 민법상의 호주제도가 폐지된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모색함에 있어서는 현행 정보사회의 전제조건에 합치하고 또한 가장 합리적인 편제방식을 채택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의 호적정보에 대한 보호는 다른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노력과 비교

19)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2000. 1, 3~4면 참조.

20) 정영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연구 제1호, 한국인터넷법학회, 2002. 6, 27~28면 참조.

하여 볼 때, 너무나도 균형이 맞지 않는 사생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 IV. 호주제도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서 개인별 신분등록제

##### 1. 의 의

현행의 호적제도 하에서의 호적편제는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를 상정하고 있는 민법상의 호주제도에 맞추어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제도가 폐지될 경우의 대안적 호적제도의 하나이자 신분등록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개인별로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따로 편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별 신분등록제에서는 ‘호주’의 개념이 사라지고, 국민 개개인이 신분등록부의 대표자로 기능하게 된다. 즉, 개인별 신분등록제에서의 신분등록은 단위를 ‘개인’으로 하므로 ‘친족’을 단위로 두고 있는 현행의 호적과는 근본이념에 있어서 전혀 다르게 된다. 이 점이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앞에서 검토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사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신분등록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신분등록의 한 방식으로서 기본가족별 편제방법(즉, 가족부 방식)<sup>21)</sup>이 아닌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민법상에 가족의 개념을 설정하거나 둘 필요성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민법에 현행 민법상의 가와는 의미와 내용이 다른 가족개념을 두더라도 그것이 현재 다양한 가족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는 사회현실 속에서는 현실적 동거친족 및 통념상의 가족개념과

21) ‘기본가족별 편제방법’은 현행 호적의 편제단위인 ‘가’와 ‘호주’를 폐지하는 대신 ‘부부와 미혼자녀’라는 현실의 가족생활공동체를 그 편제단위로 하여 각각의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호적의 편제방식을 일용 ‘가족부’로 칭하여 왔다. 즉, 가족부는 하나의 장부에 가족을 한 단체로서 등록하고, 그 장부 내에 개인별의 신분사항란을 두어 각 가족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기재·공시하는 ‘가족별 등록방식’을 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호적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는 다르게 될 수밖에 없고, 가족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특별한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개념은 개별법령에서 그 개별법령의 입법목적·취지에 따라 그 내용과 의미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sup>22)</sup> 더욱이 가족형태에 있어 그 구성의 기초형성과 유지·발전은 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주관적이고 사적인 영역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호주제도를 폐지한 이후의 신분등록방식으로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채택하는 경우, 신분등록의 방법상의 문제에 관하여는 민법이 아닌 호적법(즉, 신분등록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분등록의 문제는 신분사항의 등록·공중에 관한 절차적·기술적 사항이므로 이를 민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2. 편제원리

개인별 신분등록부는 개인이 대표자이자 등록부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출생과 혼인 등의 신분변동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개인의 신분등록부는 출생신고 등(기아발견신고, 취적신고, 귀화신고)에 의하여 새로 편제하고, 개인의 신분특정사항(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본·성별) 및 일생동안의 신분변동사유(본인의 출생·사망·인지·입양·친자관계의 변동·혼인 등)를 그 신분등록부에 모두 기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별 신분등록제에서는 호주의 성명과 본적이 아닌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신분등록부를 특정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의 호적이 갖는 가족관계의 추적기능과 공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부모(친생부모와 양친부모를 모두 포함)·배우자·자녀(혼중자, 혼외자,<sup>23)</sup> 전혼중의 자, 재혼중의 자, 양자를 모두 포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간단한 신분사항이 기록된다. 그렇지만 개인의 형제자매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부모·배우자·자녀의 신분사항을 간단히 기재하고

22) 이승우, 앞의 글, 30면. 법무부의 민법중개정법률안도 이와 같은 취지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3) 혼외자의 경우는 父의 인지가 있을 때만 父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의 개인특정사항이나 신분변동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즉, 개인정보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들의 구체적인 신분변동사항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단계별 검색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호적전산화가 완료된 이상은 전산시스템의 ‘검색기능’에 의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 3.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장점 및 문제점

#### 1) 장 점

##### (1)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의 실현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우리나라 부계혈통중심의 호적제도에서 나타나는 ‘가의식’을 사람들의 의식에서 불식하고,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인격존중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인간이 출생하면서 하나의 인격을 갖고 다른 누구에 대하여도 제도상의 종속적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을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sup>24)</sup> 또한 각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부모·배우자·자녀를 등록하는 형식이야말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인 것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고, 자율적인 개인을 지향하는 헌법이념에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5)</sup>

##### (2) 편제방법상의 편리성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호주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하므로 본적제도가 필요치 않게 된다. 그러므로 전적의 문제도 생기지 않고, 기본가족별 편제방법에서 나타나는 대표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선정방법상의 문제점도 없다. 그리고 신분등록부가 개인별로 편제되므로 현재의 호적편제기준을 채택함으로써

24) 三浦正勝, “戶籍制度のあゆみと次世代戶籍”, 戶籍時報 415호, 1992, 61면.

25) 二宮周平, “これからの家族法と戶籍制度”, 法律時報 65권 12호, 1993, 78면.



발생하는 신분변동(인지·입양·혼인 등)에 따른 복잡한 이적(제적 및 입적)·이기의 이론구성과 절차의 대부분이 필요치 않게 된다(즉, 분가·분적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또한 기본가족별 편제방법상에서 나타나는 친자동적과 관련하여 부 또는 모의 호적을 택일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sup>26)</sup>

### (3) 사생활보호의 강화 등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본인과 부모·배우자·자녀가 일괄 공시되면서도, 신분등록부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본인 이외의 가족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별 신분등록부에는 본인의 신분변동사항만 기재되고, 그 부모·배우자·자녀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인별 신분등록부는 편제원리상 개인의 신분등록부에 기록된 신분사항으로 인하여 다른 형제자매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본인과 가족들의 신분변동사유가 한꺼번에 공시되는 가족부 방식에 비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더욱 더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분산처리라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현행의 정보사회의 전제조건에 합치하게 된다. 나아가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의 사생활보호문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호적등·초본의 교부는 예컨대,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만 기재한 일부 사항 증명서, 개인사항 증명서, 전부사항 증명서 등으로 용도에 맞게 대체하여 교부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sup>27)</sup>

26) 현행의 호적제도나 기본가족별 편제방법에서와 같이 부부와 자녀의 호적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단점을 오히려 보완할 수 있다(이경희, 앞의 글, 28면).

27) 신분등록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특히 혼인외의 자와 양자 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분등록부의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 2)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반론

(1) 호적의 편제단위를 개인별로 할 경우, 너무 현격하고 급격한 변화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면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족에 있어 생활관계의 사회적 변화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핵가족 이외에도 수많은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은 이미 사회적 현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가족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와 자녀의 가족인 2세대가구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sup>28)</sup> 결국 이러한 현상은 가족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집단주의로부터 개인주의로의 변경과 가족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개인별 신분등록제 하에서는 현행 호적에서와 같은 공시기능이 저하될 것이라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현행 호적의 중심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분관계의 등록·공시기능이 저하된다고 하는 지적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행 호적이 갖는 자신의 성명의 증명, 출생·사망 연월일의 증명, 국적의 증명, 혼인·친자관계와 같은 공증기능이라면 개인별 신분등록제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모·배우자·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간단한 신분사항이 병기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형제관계는 부모란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부모의 신분등록부를 검색함으로써 완전히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가족관계를 추적하여 가는 기능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호적의 일람·공시기능이 저하된다고 하는 지적은 큰 설득력이 없게 된다.<sup>29)</sup>

28) 1세대 가구는 1980년 8.8%, 1985년 10.5%, 1990년 12.0%, 1995년 14.7%, 2000년 17.1%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는 1980년 4.8%, 1985년 6.9%, 1990년 9.0%, 1995년 12.7%, 2000년 15.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http://www.nso.go.kr)) 자료참조).

- (3) 현재의 전산화된 호적은 기존 호적부의 양식 및 호적의 편제단위 등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개정될 경우에는 그 전산시스템의 내용을 모두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시에 변경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사항뿐만 아니라 본인의 부모·배우자·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새로 찾아서 기록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확인하는데서 많은 인력과 시간 및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본다.<sup>30)</sup> 그렇지만 현재 완료된 호적전산시스템의 변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족부 방식에서도 동일한 문제일 것이다.

또한 현재 호적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제대로 검색할 수 없는 비율이 약 1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31)</sup> 이 문제는 신분등록제의 변경과 관계없이 부실호적의 정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개인별 신분사항에 주민등록번호를 보완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sup>32)</sup>

29) 현재의 호적제도 상에서도 혼인이나 입양에 의해 부모의 호적에서 제적된 후 전적이 있게 되면 이미 일람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람은子在 혼인하기 전까지의 것에 지나지 않게 되어 호적의 공시·검색기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30)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신분내력에 관련된 호적·제적을 모두 찾아서 조사하여야 하므로 그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조대현,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를 제안한다”,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2002. 10. 23), 평등사랑번호사 모임 등, 63~64면 참조).

31) 법원행정처,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및 우리나라 전산호적의 발전방향, 2003, 175면.

32) 법원행정처에서는 2003년 9월 이후에 주민등록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상호 전산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 4. 이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 1) 스웨덴<sup>33)</sup>

스웨덴에서는 출생·결혼·사망·거주이전 등의 등록은 모두 루터파의 국교회가 관할하는 교구등록소가 행하고 있다.<sup>34)</sup> 국교회가 신분등록의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아마 다른 유럽제국과 같이 신분등록이 교회부로부터 발달하여 온 역사에 의한 것일 것이다.<sup>35)</sup>

스웨덴에는 개인별로 그 사람의 생활사(life history)가 기재되는 ‘개인표’가 있는데, 이것은 1949년에 제도화되어 1968년의 컴퓨터 도입으로 간략화되었다. 이 개인표에는 본인의 배번호(背番號),<sup>36)</sup> 성명, 출생지, 부모의 배번호, 세례월일, 성인이 되어 다시 받는 세례의식월일, 혼인경력(상대방의 성명, 혼인식년월일), 출산경력(자녀의 성명·출생일·성별), 현주소도 기재된다. 그리고 이사 때마다 ‘이주년월’과 ‘이주처주소’가 추가되며, 혼외자의 경우 父의 인지가 있을 때만 父의 배번호도 기록된다.

또한 교구에서는 개인표와는 달리 당해 교구에 사는 시민<sup>37)</sup>에 대하여 개인별로 주민표가 작성되고 있다. 주민표의 카드에는 본인의 배번호, 생년월일, 성별, 성명, 현주소, 출생지(교구번호), 결혼한 연월일, 결혼상대방의 배번호(성명은 기입되지 않음), 혼인회수, 이 교구에 이사하여 온 연월일 등이 기재된다. 거주이전의 경우에는 도청의 통계국으로부터 전입처의 교구에 그 사람의 개인표와 주민표가 송부되어, 주민표와 개인표는 거주하고 있는 교

33) 善積京子 編, 非婚を生きたい, 青木書店, 1993, 166~167면을 참조함.

34) 지방자치단체는 23개의 도(landsting)와 284개의 코문(commun)이 있지만, 그것과는 따로 약 2600개의 교구가 있고, 교구는 코문과 동격의 법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지방세로서 道稅, 코문稅 외에 독자적으로 교구세가 징수되고 있다. 교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교구의회이고, 그 멤버는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더구나 교구회는 주민등록 이외에 장례나 묘소의 관리도 행하고 있다.

35) 榑原富士子, 女性と戸籍- 夫婦別姓時代に向けて-, 明石書店, 1997(第4刷, 1992(第1刷)), 206면.

36) 스웨덴 사회는 총배번호제로서 신생아의 경우는 생년월일 순으로 만들어져 간다.

37) 이 시민에는 스웨덴 국적이 아니더라도 이민국발행의 체제허가가 있는 외국인이 포함된다.

구에서 언제나 함께 관리되고 있다.

위와 같이 스웨덴에서는 출생·사망·결혼·이혼·거주이전의 정보는 집중관리되고, 그 사람의 생활사가 일괄과약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스웨덴의 신분등록은 단위를 ‘개인’으로 두고 있어 우리나라의 ‘친족’을 단위로 두고 있는 호적과는 근본이념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 2) 네덜란드<sup>38)</sup>

네덜란드는 1811년부터 시청에서 민사신분등록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전국적인 신분등록방법이 통일된 것은 1838년 네덜란드 민법전이 제정되면서 부터라고 한다.

네덜란드도 서구의 다른 나라와 같이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기 위해 출생·혼인·사망에 관하여 각각의 신분등록부를 두고 있는 사건별 편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은 1998년부터 동반자등록부<sup>39)</sup>를 도입한 것이 특징적인 점이다. 신분등록인 민사등록은 각 시청사무소에서 관장하는데, 출생·혼인·이혼·사망이 기록된다. 이 등록사무는 각 시청의 등록관이 담당하며, 또한 원본의 기록보관책임을 지는데, 부분은 매년 12월 31일 등록을 마감한 후 지방법원의 기록과로 보낸다.

한편, 네덜란드에는 위와 같은 신분등록부 이외에 우리나라의 주민등록과 유사한 인구등록이 있다. 이 인구등록은 성명, 출생일과 장소, 배우자의 성명, 자녀, 주소, 부모의 성명·출생일·출생장소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1938년에 ‘한 가족 한 카드’ 방식에서 ‘1개인 1카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38) 법원행정처, 앞의 책, 135~145면 참조.

39) 등록된 동반자관계는 전통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면서 두 사람이 반려자로서 동거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등록하는 제도로써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네덜란드 민법(1997. 10. 4, 개정법률) 제80의a조~제80의g조에 새로이 도입되었다.

## 3) 기 타

프랑스에서의 출생증서가 개인카드에 가깝다. 출생증서에는 난외부기의 방법에 의하여 출생만이 아니라 인지, 준정, 양자입양, 혼인, 별거, 이혼, 사망 등 일련의 신분변동이 기재되어 개인별 인적편성과 동일한 편성기능을 갖게 된다.<sup>40)</sup>

## V. 맺는 말

후기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접어든 오늘날은 이혼율의 가파른 상승, 혼인율의 급격한 저하 등에 따라 우리 사회의 혼인 내지는 가족관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더욱이 현실의 가정생활은 법률혼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전형가족 이외에도 부부만의 가정, 편부모 가정, 독신생활, 동성(同性)가족 등 다양한 가정생활·사생활이 공존하고 있으며, 과거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했던 가정형태가 많이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은 가족구성원인 개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서 사회·종교적인 구속으로부터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개인주의화가 되어졌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족에서의 개인주의적인 변화는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제는 그 동안의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통념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족의 구성원인 개인의 인격보호보다는 ‘가’를 우선시하던 과거의 결혼관과 가족관과는 달리, 현대의 결혼과 가족은 서로를 통하여 서로간의 인격실현을 가능케 하여야 하며, 이의 형성과 유지·발전은 우선적으로 개인의 자율적 사항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호적의 새로운 편제방법으로서는 현재와 같은 가족단위 편제방식을 굳이 고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호적의 새로운 편제기준을 현재의 부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제

40) 稻本洋之助, 프랑스의家族法, 東京大學出版會, 1985, 4면; 鈴木祿彌, “各國の身分登録制度”, 家族問題と家族法 VII, 酒井書店(1957(昭和 32년) 초판, 1980 7판), 285면 이하.

가족제도로 대표되는 ‘가의식’을 극복하고 현재의 가족관계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에 둔다면,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립적인 형태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제도는 결코 사회현실로부터 무풍지대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부부와 친자라고 하는 특정한 가족상을 기준으로 법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개인의 자율성을 고양할 수 있는 가족법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립한 개인을 기초에 둔 사회에서는 개인을 초월한 가족의 일체감을 법적으로 통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개인별 편제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자 순수한 선택이라고 보므로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곽동현, “호주제도론치론의 허구”, 가족법연구 창간호, 한국가족법학회, 1984.
- 김주수, 친족상속법(제5전정판), 법문사, 1998.
- 박병호, “호주제의 변혁과 제문제”, 민사법학의 제문제(소봉 김용한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0.
- 신영호, “호주제도를 폐지할 경우 호적제도의 정비방안”, 호주제도 정비를 위한 검토, 한국가족법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2003. 6. 17.
- 이경희, “호주제도를 폐지할 경우 호적제도의 정비방안”, 호주제도 정비를 위한 검토, 한국가족법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2003. 6. 17.
- 이승우,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의 관련법령의 정비방안 - 민법을 중심으로 -”, 여성정책포럼(2003, 가을호), 한국여성개발원.
- 정영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연구 제1호, 한국인터넷법학회, 2002. 6.
- 정현수, “개정호적법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9권 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2. 12.
- , 호적의 신편제 방안에 관한 연구 - 호주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동

- 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9. 8.
- ,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호주제 폐지, 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호주제 폐지 및 대안 심포지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3. 6. 5.
- 조대현,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를 제안한다”,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2002. 10. 23), 평등사랑변호사 모임 등.
- 법원행정처,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및 우리나라 전산호적의 발전방향, 2003.
- 행정자치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2000. 1.
- 鈴木祿彌, “各國の身分登録制度”, 家族問題と家族法 VII, 酒井書店(1957(昭和32년) 초판, 1980 7판).
- 稻本洋之助, フランスの家族法, 東京大學出版會, 1985.
- 三浦正勝, “戸籍制度のあゆみと次世代戸籍”, 戸籍時報 415호, 1992.
- 善積京子 編, 非婚を生きたい-, 青木書店, 1993.
- 二宮周平, “これからの家族法と戸籍制度”, 法律時報 65권 12호, 1993.
- , 人權と戸籍, 部落解放研究所, 1995.
- 榊原富士子, 女性と戸籍- 夫婦別姓時代に向けて, 明石書店, 1997.



# A Study of the Status Registration System on a Individual Basis

Hyunsoo Jeong\*

Family register which already has lots of problems in the modern society needs to be amended in a way to achieve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between sexes through individual's self-determination by reviewing systematization of family registe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new systematization of family register based on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between sexes. And in this thesis, I examines on the new systemization which are expected to achieve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between the sexes in marriage and family life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article 36.

If family register system is to be systematized, family register on the basis of individual is most desirable way. Because it is systematization of Family Registration which is future-oriented and enables each person to achieve self-determination. Given the family relations in a modern society, family law, as a way to provide each person with more freedom to choose its own way of life,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context, it is the purpose of human rights to build a society in which freedom is given to every individual. From this perspective, the government should take a neutral attitude to the people's life.

---

\* Ph. D, Lecturer,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Law.